2026 －3호
(2026. 8월 셋째주)

정책동향

- 국정 동향
- 시정 동향
- 타시도 동향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

https://council.jeonnam-gwangju.go.kr / 062-613-5194

목 차

Ⅰ. 국정 동향 ····· 1

1 【법 제 처】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····· 1

2 【행정안전부】 7대 역점과제 본격 추진 ····· 4

3 【기후에너지환경부】 미래사회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 본격 추진 ··· 6

Ⅱ. 시정 동향 ····· 8

1 【관광과】 전국 최초 '섬 반값 여행'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 확대 ····· 8

2 【기업도시담당과】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으로 AI 산업 거점 도약 본격화 ····· 9

3 【정책기획과】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유치 대상 45개로 확산 ····· 10

Ⅲ. 타시도 동향 ····· 11

1 【대 구 시】 국내 최초 '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' 구축 본격화 ··· 11

2 【전 북 도】 국내 최초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개시 ····· 12

3 【경 남 도】 우주항공복합도시·남해안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···· 14

국 정 동 향

1 법제처,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

- 법제처는 **8월 5일 청와대 영빈관**에서 「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」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를 진행하고, **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법제지원**을 통해 국정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힘.

- 법제처는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**▲국정성과의 속도를 높이는 입법전략 수립·관리 ▲의원입법 정부 내 One-Voice 체계 강화 ▲제재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형벌 합리화 ▲법체계 정립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▲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법적 자문제도 안착 ▲AI 법제플랫폼 구축을 선정하고, 정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법제지원을 강화**할 계획임.

- **첫째, 국정성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** 국정과제 **법안 49건을 재검토**하여 **25건의 입법방식을 법률 제정에서 개정으로 전환**하고, 범정부 법률 입법계획 **768건 가운데 하위법령으로 우선 추진 가능한 92개 과제를 선별해 신속한 정책 추진을 지원**할 계획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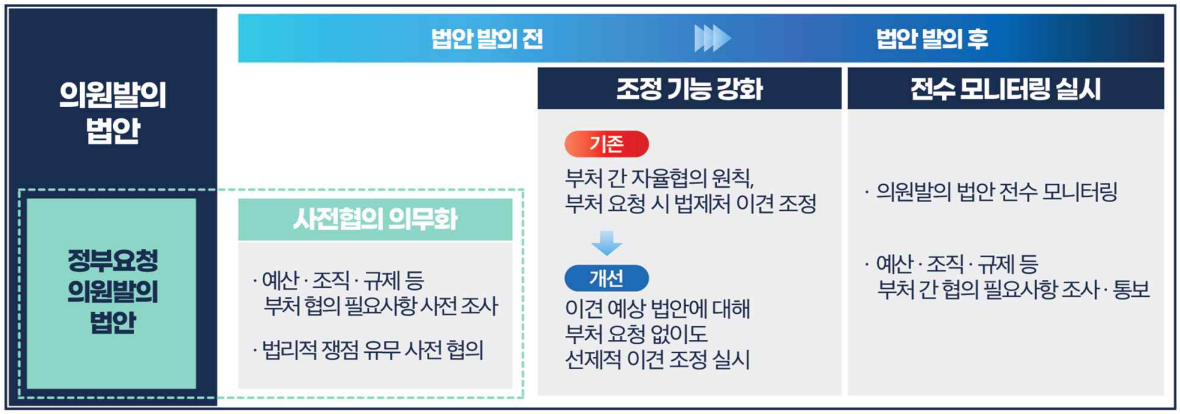
▌국정과제 법안 입법형식 개선 주요 사례 ▐

당초 **법률 제정 추진**		개선 **현행 법률 개정 추진**
(가칭) **방과후학교 지원특별법** • 방과후 돌봄·교육의 목표, 운영 체계, 중앙·지방정부 책무 등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	⏭	초·중등교육법 일부 개정

- 둘째, 의원입법 추진 과정에서 정부 내 통일된 의견(One-Voice)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요청 의원입법에 대한 법제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, 의원발의 법안 전체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.

- 또한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법체계 정합성과 정책 일관성을 강화할 예정임.

▌의원입법 정부 내 One-Voice 체계 강화 ▐



- 셋째, 법제처·법무부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1만 1천여 개 형벌 조문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조사, 일괄정비를 추진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임.

- 넷째,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3,496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 등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, 경제단체·지방정부·학계 등과 협력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법령 개선도 추진할 예정임.

● 현장 개선사례로는 의료기기 통신판매업 영업소 규제를 개선해 주택이나 창업보육센터로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고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해 법령 정비를 추진 중임.

〈 법령정비 현장 목소리 〉

▸ **"주택이나 창업보육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"**

의료기기 통신판매업의 영업소는 **주택 용도의 건축물 또는 창업보육센터만** 가능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법령을 해석·집행하고 있어 **기업의 영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**한다는 것을 파악한 **현장 공무원이 법령정비 개선 건의**를 제안, 앞으로는 영업소가 **일정 요건만 갖추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 없이 의료기기를** 통신판매 방식으로 **판매**할 수 있도록 **식약처·국토부 협의 완료**('26.6월), **정비안 마련 중**

● 다섯째, 지난 5월 출범한 법적 자문 전담기구를 통해 정책 기획·입안·집행 단계별 법률 자문과 법령입안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,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임.

● 여섯째, 행정안전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'AI 법령비서' 서비스를 운영하고,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자연어 기반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누구나 질문만으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AI 기반 법제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임.

2 행안부, 하반기 7대 역점과재 본격 추진

- 행정안전부는 8월 5일 「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」를 통해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, **하반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7대 핵심 추진과제**를 발표함.

- **첫째, 국민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**을 위해 **AI 기반 '혜택 자동 신청 서비스'**를 연내 시범 개통하고, **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**를 도입할 계획임.

- **또한 '모두의 토론회', '모두의 광장' 운영과 「시민참여 기본법」 제정**을 추진하고, **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(온 AI) 확대 및 공직 AI 전문가 2만 명 양성**을 통해 **디지털 행정 혁신**을 추진할 방침임.

- **둘째, 책임 있는 지방자치와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**를 위해 **주민 제안 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**하고, **지방 행정 모니터단 운영과 주민소환제도 개선** 등을 추진할 계획임.

- **아울러 「사회연대경제 기본법」과 「기본사회기본법」 제정**을 추진하고, **청년 마을 조성 및 햇빛소득 마을 확산** 등을 통해 **지역 주도 성장 기반**을 마련할 예정임.

- **셋째, AI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고도화**를 위해 **「제1차 생명안전 종합계획」을 수립**하고, **풍수해 AI 예측모델**을 구축할 예정임.

- **또한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무더위쉼터 확대, 수상안전요원 및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확충, 산불·대형화재 대응훈련, 어린이 통학로 개선** 등을 추진할 계획임.

- **넷째,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**을 지원하기 위해 **전문 수사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**할 예정임.

- **아울러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**와 **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 구축** 등을 통해 **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**를 강화할 방침임.

- **다섯째,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**를 위해 **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**을 추진하고, **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**를 추진할 계획임.

- **또한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**하고, **'인구 활력+지역' 지정**을 통해 **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**을 강화할 방침임.

- **여섯째, 간첩 조작·국가 폭력 가해자 정부포상 취소**와 **인권 침해 사건 후속 조치**를 추진할 예정임

- **또한 하천·계곡 불법시설과 불법 현수막 정비,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** 등을 통해 **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**에 나설 계획임.

- **일곱째,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, 미성년 자녀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, 빗물받이 위치표시 표준안 마련** 등을 추진해 **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**를 제공할 계획임.

- **또한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**을 도입하는 등 **생활밀착형 과제를 신속히 추진**해 **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안전성**을 높여나갈 방침임.

3 기후부, 하반기 미래사회 도약을 위한 핵심정책 본격 추진

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**8월 4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**를 통해 상반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, **하반기 미래사회 도약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추진과제**를 발표함.

- **첫째,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'전기국가(Electro-state)' 실현**을 추진할 계획임.

- 태양광·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원전 적정 운영을 병행하고, **간척지·접경지역 대규모 태양광 조성, 공장지붕 태양광 의무화, 주택용 태양광 잉여전력 현금 정산** 등을 통해 **재생에너지 기반을 강화**할 방침임.

- **또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(AIDC)와 첨단산단 전력 수요 대응**을 위해 **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(BESS)를 확충**하고, **지역별 전력요금체계 개편, 전력감독원(가칭) 신설,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, 석탄발전 조기폐지 로드맵 마련** 등을 통해 **안정적이고 공정한 전력체계 구축**을 추진할 예정임.

- **둘째, 기반시설 혁신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 구축**을 추진할 계획이며, **국가수도기본계획 재검토 주기 단축, 하천수 허가물량 재배분, 농업용수·발전용수의 복합 활용** 등을 통해 **수자원 운용 효율성**을 높일 방침임.

- **아울러댐과 하천 연계 운영 확대, 광역상수도 전면 정비, 하수처리수 재이용, 지하수저류댐 및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 확대** 등을 통해 **가뭄·홍수 등 기후재난 대응 물관리 체계**를 강화할 예정임.

- **셋째,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**을 통해 **K-GX(녹색 대전환) 실현**을 추진할 계획임. **철강·석유화학·정유·시멘트·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산업 구조 전환**을 추진하고, **업종별 핵심기술 확보와 관계부처 합동 K-GX 전략 마련**을 추진할 방침임.

- **또한2030년 신차 전기차 비중 50% 달성 및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**을 추진하고, **히트펌프 보급 확대, 녹색금융 지원, 재생에너지 산업 및 직류산업 육성** 등을 통해 **녹색성장 기반과 미래 신성장동력**을 강화할 계획임.

- **넷째,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**을 추진할 계획임. **미래 폐자원 회수, 핵심광물 추출, 폐배터리 순환이용 생태계 조성** 등을 추진하고, **핵심광물 함유 폐자원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**도 병행할 방침임.

- **아울러재생원료 사용의무 확대, 다회용기 사용 확산, 의류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**과 함께 **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**을 통해 **제품 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 기반**을 강화할 예정임.

- **다섯째, 기후재난과 환경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안전망 강화**를 추진할 계획임. **AI 기반 홍수 대응 체계 구축, 국가하천 AI 감시카메라 및 디지털 트윈 활용 홍수관리, 빗물받이 정비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** 등을 통해 **재난 대응 역량**을 강화할 방침임.

- **또한화학물질 안전교육 및 위험사업장 안전관리 지원, 미승인 살생물제품 유통 차단, AI 기반 독성평가 체계 마련**을 추진하고, **고농도 오존 예보와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** 등을 통해 **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**에 나설 예정임.

시정 동 향

1 관광과, 전국 최초 '섬 반값 여행'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 확대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'2026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'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전국 최초 '섬 반값여행' 사업을 추진하며 섬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나서고 있음.

- 섬 반값여행은 타 지역 거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섬 여행 시 발생하는 운임, 숙박, 음식, 체험 등 관광경비의 50%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관광지원 사업으로,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섬 지역 체류와 소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.

- 사업은 8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목포, 여수, 고흥, 보성, 강진, 영광, 진도, 신안 등 8개 시군 16개 섬에서 운영되며,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8월 10일부터 'JG TOUR'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여행 시작일 5일 전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음.

- 참여 관광객은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록 후 승인 절차를 거쳐 여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섬 지역 내 숙박업소·음식점·카페·체험시설 등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후 소비 금액의 50%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음.

- 특히 섬 지역 내 3만 원 이상 소비 시 해당 섬이 속한 지역 가맹점 이용 실적도 인정하는 등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, 지역화폐 환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.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**행정안전부 '2026 섬 방문의 해'와 연계한 공동 홍보**와 함께 **JG TOUR 앱을 활용한 남도 숙박 할인, 1+1 투어 이벤트 등 통합 마케팅**을 추진해 **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.**

- 아울러 **섬 반값여행을 전국 최초의 체류형 섬 관광 모델로 정착**시켜 **2026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와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, 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임.**

2 기업도시담당과,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으로 AI 산업 거점 도약 본격화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에서 **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식을 개최하고,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했음.**

- 국가 AI컴퓨팅센터는 **인공지능 연구개발과 AI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초고성능 GPU 기반 컴퓨팅 자원을 구축·운영하는 국가 핵심 디지털 인프라**로, 산업계와 연구기관, 대학 등에 안정적인 AI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.

- 센터는 **2028년까지 40MW 규모로 구축하고, AI 수요 증가에 따라 2030년까지 80MW 규모로 단계적 확대**할 계획이며, **총사업비 약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해남군 산이면 기업도시 내 전산동·운영동·부속동 등을 조성**할 예정임.

- 특히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**AI 반도체, 클라우드, 데이터, 소프트웨어, 디지털서비스 관련 기업 집적과 전문인력 유입이 기대**되며,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, 산학연 협력을 통한 **대한민국 대표 AI 혁신 생태계 구축**이 전망됨.

- 또한 국가 AI컴퓨팅센터는 **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‘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’의 핵심 거점**으로 자리매김해 **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전략적 기반**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.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**AI 반도체, 전력, 첨단 제조 역량을 연계한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, 국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.**

3 정책기획과,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유치 대상 45개로 확대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**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**를 앞두고 **공공기관 유치 대상 기관을 기존 40개에서 45개로 확대**하고, 유치 목표를 재정비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 막판 총력전에 나섰음.

- 기존 **에너지·환경, 농수산, AI 등 첨단산업, 문화예술,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기관**에 더해 **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, 용수관리, 소부장 기업지원 등 관련 공공기관**까지 유치 대상에 포함하며 유치 전략을 확대했음.

- 이를 위해 관계부서와 교육청, 전남연구원, 광주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**제3차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회의**를 개최하고, 기존 전남도 중심으로 운영하던 유치추진단을 **관계부서를 포함한 100여 명 규모로 확대 개편**해 범특별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했음.

-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**40개 목표 기관 가운데 27개 기관을 직접 방문**하는 등 현장 중심 유치활동을 추진해 왔으며,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산업역량을 결집하고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임.

- 회의에서는 **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3대 핵심 전략**을 마련하고. **8~9월 수도권과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산업경쟁력 홍보,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, 범특별시민유치위원회(가칭) 구성 및 범시민 유치운동 전개**를 중점 추진해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과 경쟁력을 적극 알릴 계획임.

- 또한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**주거·교육·생활 인프라 개선**을 추진하고, 사회단체와 연계한 범시민 유치 활동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임.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**행정통합에 따른 정부 인센티브와 특별법상 공공기관 우선 이전 원칙**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.

타 시 도 동 향

1 대구, 국내 최초 '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' 구축 본격화

- 대구시는 **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사업**을 본격 추진하고, **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 연계한 안전인증 거점 조성**을 통해 **세계적인 로봇산업 중심도시 도약**을 추진함.

- 이번 사업은 **산업통상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**으로, **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전성 검증과 국제표준 기반 인증체계 마련**을 목표로 추진됨.

- **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**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**186.5억 원(국비 96.8억 원, 지방비 78억 원, 민자 11.7억 원)**을 투입해 **달성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**에 조성될 예정임.

- 사업은 **한국로봇산업진흥원**이 총괄하고, **고등기술연구원, 대구기계부품연구원, 계명대학교,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전문기관**이 참여해 **시험·평가-실증-인증 원스톱 지원체계**를 구축할 계획임.

- 센터는 **동적 안정성, 인공지능(AI) 신뢰성, 사이버보안 평가체계**를 마련하고, 휴머노이드 로봇의 **안전성 검증 및 국제표준 인증 지원**을 통해 국내 기업의 **안전인증 획득과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**를 지원할 예정임.

- 특히 **EU 인공지능법(AI Act), 사이버복원력법(CRA) 등 글로벌 규제 강화에 선제 대응**하고, 국내 로봇기업의 인증 부담을 줄여 **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**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.

- 대구시는 **국가로봇테스트필드,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등 기존 로봇산업 인프라와 안전인증센터를 연계**해 연구개발부터 실증, 인증,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**완결형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**을 추진할 방침임.

2 전북, 전국 첫 보육활동 보호센터 공식 출범

- 전북특별자치도는 **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**을 위해 **전국 최초로 '보육활동 보호센터'를 공식 출범**하고 보육활동 보호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음.

-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**보육활동 보호센터 현판식**을 개최하고, **보육교직원의 심리 회복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운영**을 시작했음.

- 최근 **보호자의 폭언·폭행, 과도한 민원 등 보육활동 침해 사례**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, 피해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호센터를 설치했으며 **보육활동 침해 상담,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지원, 법률상담 연계, 침해 예방교육, 보호자 인식개선 교육·홍보,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**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.

- 또한 **한국보육진흥원의 심리회복 프로그램 '담풀'**과 연계한 심리 지원을 비롯해 **권리교육과 안심상담 프로그램**을 운영하고, **보육활동 침해로 교직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 지원**까지 연계하는 등 **침해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**를 구축했음.

- 이번 보호센터는 **서울·경기도가 기존 고충처리기구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독립된 보육활동 보호 전담기구를 공식 출범한 전국 첫 사례**로,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독립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상호 존중하는 보육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.

-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**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심리 회복과 권익 보호를 강화해 아이·부모·보육교직원이 모두 신뢰하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**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.

3 경남, 우주항공복합도시·남해안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

- 경상남도는 **국회를 방문해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」과 「남해안권 발전 특별법」의 조속한 제정**을 건의하고,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요청했음.

- 경남도는 **두 특별법을 영호남 상생과 국가 미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법안**으로 보고, **국회 토론회 개최, 국회 방문 건의 등 입법 공감대 확산**을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.

- **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**은 정부의 **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**을 뒷받침하기 위해 **산업·연구·행정 기능을 집적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**을 목적으로 하며,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임.

- 또한 **남해안권 발전 특별법**은 **해양관광과 조선·우주항공·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, 보전산지·국립공원·수산자원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개선,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**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- 경남도는 앞으로 **남해안권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**하고, 이를 기반으로 **남해안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이자 세계적 해양관광·우주항공 산업 거점으로 육성**해 나갈 계획임.

참 고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」 핵심 조항

구 분	주 요 내 용
제1조(목적)	‣ **우주항공분야의 산업 활성화, 산학연협력 촉진**을 위해 **새롭게 조성**하는 **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**하여 **국가 발전 이바지함**
제2조(정의)	‣ **"예정지역"이란 우주항공,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**
제26조·제27조 (위원회 구성)	‣ **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**하되,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**관계부처 차관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관할 시·도지사, 민간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**
제29조 (전담조직 설치)	‣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**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**
제30조 (특별회계 설치)	‣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·운용하는 **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**를 **설치**하도록 함
제39조 (예타면제 특례)	‣ 기획재정부장관은 **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예비타당성 조사**를 **면제 특례** 규정
제40조~47조 (각종 지원사항)	‣ **우주항공캠퍼스 조성·운영, 자율학교·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, 외국교육기관의 설립·운영 특례, 연구기관·국제기구· 종합병원·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,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·자금지원**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

우주항공,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

▶ **(경남)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(사천·진주지구)**

- 위치 : (사천지구) 경남 사천시 용현면 일원
  (진주지구) 경남 진주시 정촌면 일원
- 면적 : 1,662,076㎡(50만 평)
  (사천지구 25만평, 진주지구 25만 평)
- 기간 : 2017~2025년
- 사업시행 / 승인기관 : LH / 국토부

<경남 우주항공 국가산단(사천지구)>

<경남 우주항공 국가산단(진주지구)>

▶ **(전남광주)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**

- 위치 : 전남광주 고흥군 봉래면 일원
- 면적 : 1,519,660㎡(46만 평)
  (1산단 14만 평, 2산단* 32만 평)
  * 2산단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사업 대행
- 기간 : 2026~2032년
- 사업시행 / 승인기관 : LH, 전남개발공사 / 국토부

<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(1산단, 2산단)>

참 고 **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핵심내용 및 규제 현황**

❑ 특별법안 핵심내용(현행법 비교)

구분	남해안권 발전 특별법(안)	현행법(해안내륙발전법)	비교
범 위	**남해안권**(경남·전남광주·부산)	**전국**(6개 권역)	지역 특화법 전환
추진기구	**조직 신설** (남해안종합개발청/국토부, 남해안발전위원회/총리실)	**기존 국토부 산하 조직** (국토정책심의회·기획단 중심)	국가 컨트롤타워 신설
규제완화 확대	**특례 신설** (보전산지·개발제한구역 해제)	-	핵심 규제 대폭 완화
재정지원	**특별회계 설치**	-	안정적 재원 확보
예타면제	**예비타당성조사 면제**	-	전략사업 추진 가속화

❑ 규제현황

○ 해안권별 규제 면적 비교

- **(남해안의 규제면적)** 동·서해안의 2.5배~4.5배

▶ 수산자원보호구역 동해안의 37배 / 보전산지 서해안의 13배 / 국립공원 서해안의 4배

(단위 : ㎢)

구 분	남해안권				동해안권	서해안권	비고
	합계	경남	전남광주	부산			
계	**11,773**	**3,783**	**7,493**	**497**	**4,624**	**2,548**	
수자원보호구역	**408**	135	273	-	**11**	68	
보 전 산 지	**5,745**	2,060	3,445	239	2,639	**418**	
국 립 공 원	**554**	207	346	-	324	**138**	
개발제한구역	**431**	233	-	198	253	267	

※ 연안에 인접한 시군대상으로 산정

○ 권역별 규제 비율

- 특히 **경남 남해안은 복합규제 면적**을 모두 합치면 **경남의 행정구역 전체 면적을 초과**하여 땅보다 규제면적이 많음**(전체의 113%)**

(단위 : ㎢, %)

구 분	남해안권				동해안권	서해안권	비고
	합계	경남	전남광주	부산			
규제비율(B/A)	91.7	**113.5**	83.8	86.9	50.8	26.7	
행정구역면적(A)	12,843	**3,333**	8,938	572	9,099	9,530	
규제 총면적(B)	11,773	**3,783**	7,493	497	4,624	2,548	